문 23. 소년 형사사건절차와 소년 보호사건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.
- ②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.
- ③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재판을 받으면 「형사보상법」이 적용될 수 있다.
- ④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⑤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부 판사는 검증,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.

문 24. 「소년법」상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.
- ②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.
-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도 원칙적으로 노역장유치 선고가 가능하다.
- ⑤ 소년부는 송치 받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8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다.

문 25.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에 의하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폭력행위의 제지
- ② 범죄수사
- ③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로의 피해자의 인도
-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
- ⑤ 피해자의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

국제법

문 1. A국에 인접한 공해에서 B국 국적의 30만톤급 대형유조선이 좌초되었고, 동 선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대량의 원유가 해류를 따라 A국 연안으로 급박하게 밀려들고 있다. 이에 A국은 자국 연안 및 영해의 오염 확산을 막고자 B국과의 협의 없이 동 선박을 폭파하였다. 이 사안에서 A국이 B국의 국가책임 추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'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' 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적합한 것은?

- ① 동의(consent)
- ② 자위권(self-defence)
- ③ 대항조치(countermeasures)
- ④ 조난(distress)
- ⑤ 긴급피난(necessity)

문 2.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률상 승인(recognition de jure)과 사실상 승인(recognition de facto)은 모두 법적 효과를 갖는다.
- ② 신생국의 국제기구 가입은 그 국제기구 회원국들의 집단적 승인으로 간주된다.
- ③ 국가승인은 국가의 재량적 행위로 신생국을 승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.
-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법적 무력행사로 수립된 국가에 대한 불승인의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.
- ⑤ 국가의 성립요소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승인한 사례가 있다.

문 3. A국 국민인 갑이 B국 영해를 항해하고 있는 C국 여객선 내에서 D국 국적의 승객들에 대해 '인도에 반한 죄'(crimes against humanity)를 범한 경우 D국이 갑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?

- ① 수동적 속인주의 또는 보편주의(세계주의)
- ② 객관적 속지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
- ③ 주관적 속지주의 또는 보편주의(세계주의)
- ④ 주관적 속지주의 또는 보호주의
- ⑤ 보편주의(세계주의) 또는 능동적 속인주의

문 4.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UN헌장 제2조 제7항은 본질적으로(essentially) 국내문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②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은 전적으로(solely) 국내문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.
- ③ UN헌장은 국내문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권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.
-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(PCIJ)는 국내문제인지 아니면 국제문제인지에 대한 구분은 상대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.
- ⑤ UN은 UN헌장상의 국내문제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.

문 5.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(法源性)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,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국제법의 흠결로 인한 재판불능(non liquet)의 방지
- ② 상충되는 내용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의 배제
- ③ 재판관의 독단적인 판단 방지
- ④ 국가주권에 기초한 유리한 추정의 남용 방지
- ⑤ 국제법의 미확정분야에서의 국제법의 충실화의 촉진

문 6.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상설국제사법재판소(PCIJ)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였다.
- ② 우리나라의 경우,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에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로 될 수 있다.
- ③ 국내법에 저촉되는 조약이라도 국제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다.
- ④ 미국의 경우, 조약을 국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⑤ 켈젠(H. Kelsen)은 근본규범설에 입각하여 국제법우위일원론을 주장하였다.

문 7.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?

- ㄱ. 국제의무의 위반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.
- ㄴ. 국가책임은 다른 국가에 대한 간접침해(indirect injury)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.
- ㄷ. 사인(私人)의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가 상당한 주의(due diligence)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.
- ㄹ. 외국인에 대한 재판절차가 불공정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ㅁ. 외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국제법 위반행위는 국가에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.

- ① ㄱ, ㄴ, ㄷ
- ② ㄱ, ㄴ, ㄹ
- ③ ㄱ, ㄷ, ㅁ
- ④ ㄴ, ㄷ, ㄹ
- ⑤ ㄴ, ㄹ, ㅁ

문 8.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.
- ② 일방 체약국이 행한 유보는 원칙적으로 타방 체약국 모두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.
- ③ 조약 적용상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.
- ④ 허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가능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다.
- ⑤ 조약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.

문 9. 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구두조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.
- ② 조약은 가입허용 여부에 따라 보편조약, 일반조약 그리고 특별조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.
- ③ 조약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은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.

- ④ UN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.
- ⑤ 신사협정(gentlemen's agreement)은 조약의 일종이다.

문 10.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 혹은 시행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,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사실을 이유로 종료한다.
- ② 양자조약의 일방 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(material breach)은 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를 타방 당사국에 부여한다.
- ③ 조약의 이행불능이 그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에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그 이행불능을 원용할 수 있다.
- ④ 조약의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서만 원용될 수 있다.
- ⑤ 조약 당사국 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은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존재가 그 조약의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약에 의하여 그 당사국 간에 확립된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문 11.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이다. 옳은 것(○)과 틀린 것(×)을 맞게 표시한 것은?

- ㄱ. 범죄인인도는 국가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.
- ㄴ.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인을 인도할 수 있다.
- ㄷ. 범죄인인도 전반을 규율하는 보편적인 다자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.
- ㄹ. 한국은 「범죄인인도법」(1988년)을 제정하고, 호주와 최초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.
- ㅁ. 인도요청된 범죄보다 경한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.

- ① ㄱ(○), ㄴ(○), ㄷ(○), ㄹ(○), ㅁ(×)
- ② ㄱ(○), ㄴ(×), ㄷ(○), ㄹ(○), ㅁ(○)
- ③ ㄱ(×), ㄴ(○), ㄷ(○), ㄹ(○), ㅁ(×)
- ④ ㄱ(○), ㄴ(○), ㄷ(×), ㄹ(○), ㅁ(○)
- ⑤ ㄱ(○), ㄴ(×), ㄷ(○), ㄹ(×), ㅁ(○)

문 12.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국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자국민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.
- ②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자신의 권리이므로 국가가 그 행사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.
- ③ 국제사법재판소(ICJ)는 ‘인터한델(Interhandel) 사건’에서 이중국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진정한 관련(genuine link)이 있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.
- ④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요건으로 피해자의 국적계속의 원칙이 있다.
- ⑤ 국내적 구제수단이 없거나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
문 13. 1982년 UN해양법협약상의 해협통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공해와 외국의 영해를 연결하는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적용된다.
- ② 통과통항은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③ 국제항행용 해협 안에 항행상 및 수로상의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성이 인정되는 공해통과항로가 있는 경우, 이 해협에서는 통과통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하여 형성된 해협으로서, 섬의 해양쪽에 항행상 및 수로상의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성이 인정되는 공해통과항로가 있는 해협에서는 통과통항이 적용된다.
- ⑤ 연안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통과통항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
문 14.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권리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으로 구분하고 있다. 다음 중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사항만으로 올바르게 짝지워진 것은?

ㄱ. 어업	ㄴ. 해양의 과학적 조사
ㄷ. 폐기물 투기의 규제	ㄹ. 인공섬의 설치
ㅁ. 석유의 채굴	ㅂ. 풍력발전

- ① ㄱ, ㄴ, ㄷ
- ② ㄱ, ㄷ, ㅁ
- ③ ㄱ, ㅁ, ㅂ
- ④ ㄴ, ㄷ, ㄹ
- ⑤ ㄴ, ㄹ, ㅂ

문 15.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없다.
- ② 기국의 외교관이 현지당국에 지원을 요청하면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 내에서 통항 중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.
- ③ 영해에 정박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의 목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.
- ④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외국 군함에게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연안국 수역을 항행하기 위하여 선박 스스로 부담한 의무의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의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.

문 16. 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은 것은?

ㄱ.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
ㄴ. 신회원국 가입 승인
ㄷ. 예산안 심의 및 승인
ㄹ. 사무총장 임명
ㅁ.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 요청
ㅂ. 회원국 제명

- ① ㄱ, ㄴ, ㄷ
- ② ㄱ, ㄴ, ㅁ
- ③ ㄱ, ㄷ, ㅂ
- ④ ㄴ, ㄹ, ㅁ
- ⑤ ㄴ, ㄹ, ㅂ

문 17. UN헌장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?

- ㄱ. 강제조치의 대상인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에 대한 정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.
- ㄴ. 총회는 회원국으로서의 분담금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.
- ㄷ. 회원국이 체결한 조약을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UN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.
- ㄹ.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.
- ㅁ. 총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,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,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ㅁ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ㄴ, ㅁ

문 18. 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UN 사무총장은 UN의 행정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UN 총회의 허가를 받은 세계보건기구(WHO)는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지만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서면 또는 구두진술을 할 수 있다.
- ④ 권고적 의견이 요청된 경우에도 ICJ규정 제31조에 규정된 임시재판관(judge ad hoc)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.
- ⑤ 권고적 의견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,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조약을 체결하여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.

문 19. 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재판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워진 것은?

- ㄱ.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도 이들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회부되는 경우 IC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ㄴ. 특정의 분쟁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ICJ가 스스로 결정한다.
- ㄷ. ICJ는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평과 선(ex aequo et bono)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.
- ㄹ. 상설국제사법재판소(PCIJ)규정에 의한 선택조항(optional clause)의 수락선언은 ICJ에 대하여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.
- ㅁ. ICJ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조치(provisional measures)를 제시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ㅁ
- ⑤ ㄷ, ㄹ

문 20. 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소재판부(Chamber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ICJ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소재판부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, 실제로 '메인(Maine)만 사건'에서 이러한 소재판부가 설치되었다.
- ② 1993년 ICJ는 환경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 7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를 설치한 바 있다.
- ③ ICJ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이소송절차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, 재판관 5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를 매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소재판부는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헤이그 이외의 장소에서 개정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⑤ 소재판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전원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.

문 21. 세계무역기구(WTO)의 분쟁해결절차에서 다음 국제통상에 관한 법적 문서들 상호간 효력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- ㄱ.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(반덤핑협정)
- ㄴ.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(WTO설립협정)
- ㄷ.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 1994)
- ㄹ. 미국의 반덤핑법규

- ① ㄱ→ㄴ→ㄷ→ㄹ
- ② ㄱ→ㄴ→ㄹ→ㄷ
- ③ ㄱ→ㄷ→ㄴ→ㄹ
- ④ ㄴ→ㄱ→ㄷ→ㄹ
- ⑤ ㄴ→ㄱ→ㄹ→ㄷ

문 22. 세계무역기구(WTO)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일반이사회는 연간 예산안을 회원국의 반 이상을 포함하는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한다.
- ②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, 컨센서스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 사안은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유럽공동체(EC)는 투표권을 행사할 때 WTO 회원국인 EC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갖는다.
- ④ 각료회의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의무의 면제(waiver)를 결정하는 경우,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다.
- ⑤ 각료회의는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새로 가입하려는 국가의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.

문 23. 세계무역기구(WTO)의 분쟁해결에서 협의, 패널절차 또는 상소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제3자는 분쟁해결기구(DSB)에 협의 참가 의사를 통고하면 동 분쟁의 협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.

- ② 패널절차에서 제3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.
- ③ 제3자의 서면입장은 분쟁 당사자에게 전달되며, 패널보고서에 반영된다.
- ④ 제3자는 패널절차의 대상인 조치가 대상협정에 따라 자국에 귀속된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한다고 간주하는 경우, 분쟁해결양해(DSU)에 따른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.
- ⑤ 제3자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으나, 상소절차에서 제3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.

문 24. 세계무역기구(WTO)의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?

- ㄱ. 2개 이상의 회원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, 이러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관련 회원국의 권리를 고려하여 단일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.
- ㄴ. 분쟁당사자의 국민은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.
- ㄷ.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패널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을 때, 패널위원은 개별의견을 실명으로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.
- ㄹ. 패널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분쟁해결기구(DSB)의 의장이 패널위원을 임명한다.
- ㅁ.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위원으로 패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ㅁ
- ④ ㄷ, ㄹ
- ⑤ ㄹ, ㅁ

문 25. 세계무역기구(WTO)의 분쟁해결에서 비위반제소(non-violation complaint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비위반제소를 다룬 사례로 '일본-필름 사건'(Japan-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)이 있다.
- ②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피소국은 문제된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.
- ③ 비위반제소는 위반제소와 병행하여 제기될 수 있다.
- ④ 피소국의 조치로 인해 대상협정상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어야 한다.
- ⑤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와 피소국의 조치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.